취·창업 언론 기사 자료

2018년 12월 17일

취·창업지원센터

2018. 12. 17(월)

언론사명	주 요 기 사 내 용	페이지
머니투데이	○ 2주뒤 지자체 청년 의무고용 사라진다	1
	○ 경찰 70% 채용 필기과목 헌법 추가 반대	5
매일경제	○ 2년간 6조들여 공공알바 취업인턴만 양산	2
	○ 직업훈련비로 공짜 취미생활…실업급여 받아 해외여행 펑펑	3
	○ 청년農 게임기 사는데 쓰인 취업지원금	7
광주일보	○ 6차례 합동일자리 박람회 430명 취업 성공	4
동아일보	○ 단순 노무직 1년새 10만명 줄어 역대 최다	6

2주뒤 지자체 청년 의무고용 사라진다

공공부문 청년 3% 고용 의무화 '청고법' 이달말 효력 끝나
정부, 5년 연장법안 제출… 국회 환노위 파행 상정도 못해

2주 뒤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의무고용이 사라진다.

공공부문의 청년 고용비율을 의무화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고법)이 올 연말 효력을 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파행으로 법안은 상정도 못한 상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청고법의 효력이 끝난다. 청고법은 정부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전·제도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2003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 기간 연장과 함께 명칭이 변경됐고 청년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2차례 연장돼 이달 31일이 기한이다.

청고법은 청년고용을 위한 구체적 정책 시행보다 정부의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청고법 중 구체적인 정책을 밝힌 부분은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다.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청고법이 연장되지 않아도 당장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채용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 여전히 청년채용비율이 남아있기 때문에 청고법이 사라진다고 당장 청년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낮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다. 13개 광역시·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는 청고법에 근거해 자치조례에 청년의무고용을 명시했다. 각 지자체의 청년의무고용비율 3% 역시 청고법을 본떠 조례를 만든 경우가 적지 않다. 이밖에 민관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자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례 역시 청고법을 근거로 삼고 있다.

청고법이 올해 끝나기 전 고용부는 지난달 9일 이 법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고법의 유효기간을 5년, 청년의무고용제는 3년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또 현재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청년고용지원대상 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싸고 지난 4일 파행되면서 청고법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지난 1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청고법 등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청고법을 비롯한 중점법안을 연내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민주당은 청고법을 야당과 의견차가 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길어지면서 2주가량 남은 청고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부는 청고법이 이대로 사라질 경우 지자체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는 중이다. 전국 지자체 청년고용정책을 점검한 뒤 이번주 초 일몰법 기간만료 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고법 연장이 연내 처리되면 좋겠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경우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새 법을 제정할 경우 기존 법기간 연장보다 훨씬 더 많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적지 않은 기간에 청고법 공백에 따른 청년고용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매일경제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A03면 종합

2년간 6조들여 공공알바·취업인턴만 양산

공공일자리정책 효과 낙제점

'단기 공공 아르바이트' 오명에도 정부가 강행해온 직접일자리사업이 '취포자(취업포기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민간 일자리에 취업한다는 당초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직접일자리사업의 무능을 인지하고도 내년에 올해(3조2000억원)보다 6000억원 증액된 3조8000억원의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이후 민간 일자리 취업률은 평균 16.9%에 불과했다. 정부는 당초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이 민간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 정화나 산림 덩굴 제거 같은 단기 공공 아르바이트의 실효성 논란에도 정부가 직접일자리사업을 강행해온 이유다. 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단기 아르바이트생 6명 중 1명꼴에 불과했던 셈이다.

고용부는 또 중앙 부처와 지자체들에 배포한 문서에서 "많은 직접일자리사업은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반복 참여자를 양산하고 있었다"고 자인했다. 10명 중 4명꼴인 39.2%가 이 같은 반복 참여자로 분류됐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 대상은 장기 실업자 같은 취업취약계층인데 고용부가 직접 밝힌 올해 취업취약계층 비율은 36.3%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을 배포하면서 취업취약계층 비율 목표를 70%로 제시했지만 달성률이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친 셈이다. 고용부는 "합동지침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에 반영해 예산 편성과 연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일자리에 대한 '오기'는 계속되고 있다. 나랏돈을 인위적으로 투입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늘린다는 논란은 정부가 지난 10월 5만9000개 단기 아르바이트 창출을 골자로 하는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크게 확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직접일자리예산을 3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올해(3조2000억원)보다 12.5%(6000억원) 늘렸다.

기획취재팀=손일선 차장(팀장)·임성현·정석우·최희석·김태준·연규욱·문재용 기자

직업훈련비로 공짜 취미생활…실업급여 받아 해외여행 '펑펑'

줄줄 새는 일자리 예산 백태

지난해 2년간의 계약직 근무를 마친 남형석 씨(가명·31)는 실업급여 450만원을 여유자금 삼아 40여 일간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 남씨는 "생활자금이 충분해 급하게 일자리를 구할 필요는 없었다. 마침 실업급여까지 지급되니 재충전을 위해 여행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한 달에 두 차례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취업원서만 쓰면 돼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남씨는 "본격적인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는 3개월 뒤부터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나랏돈이 매년 수십조 원씩 지출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예산 22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예산도 2조원은 넘는다는 게 관가의 예측이다.

하지만 이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7개월간 막대한 혈세를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음에도 고용시장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재정 투입이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처절히 무너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줄줄 새고 있기 때문이다. 3조원이 투입된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 역시 게임기나 상품권 구매에 낭비됐음에도 걸러지지 못했다. 일자리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조8000억원가량의 실업급여로 일부 실업자는 재취업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대신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관광 분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미명 아래 배정된 300억원 규모 관광산업 융자지원 일자리 예산 역시 간판만 차려놓은 유령 여행사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민간을 대신해 정부가 세금으로 '시장 실패'를 보완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정부 실패'가 나타난 것이다.

직장인의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 수강비용이 직업훈련 명목으로 일자리 예산에서 나가고 기왕에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내일배움카드' 취미용 전락
전기기능사 강좌 텅텅 비고
바리스타 수강생만 북적

인기 높았던 中企 직무훈련
300억 예산 전액 삭감되기도

정부주도 일자리정책 구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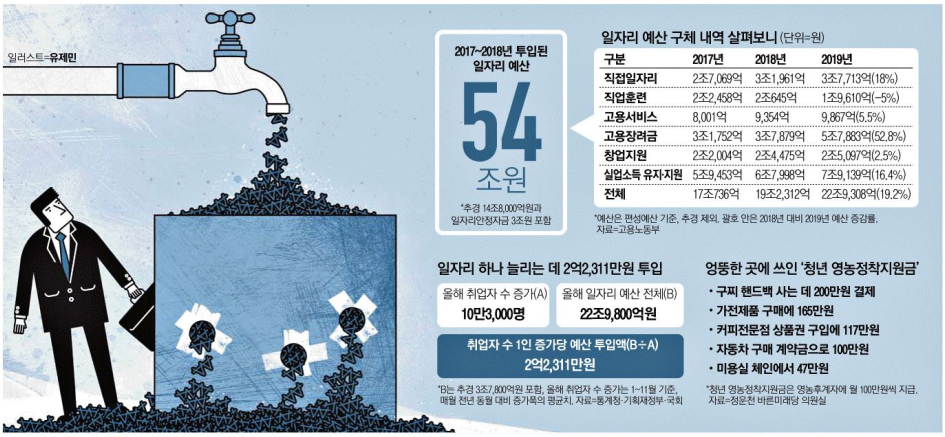
여유 있는 고령층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혜택을 받아 '월급'이라는 횡재를 하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실제 직업훈련을 위한 온라인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는 직장인들의 취미생활 지원금제도란 오명을 얻은 지 오래다.

가령 직장인이 더 나은 양질의 직장으로 전직하기 위한 전직 훈련 차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해당 분야로 이직할 계획이 없는 직장인들이 취미 활동 차원에서 나랏돈을 받아 강좌 수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훈련 명목의 학원 수강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이 50.7%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제과제빵 강좌처럼 직장인들이 취미생활 용도로 즐기는 강좌에만 수강생이 몰려들고,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처럼 실제 취업 수요와 상관성이 높은 강좌는 지원율이 미미하다.

2015년 시작된 '인문특화 취업아카데미'도 허술한 직업훈련 정책의 하나로 꼽힌다. 인문계 대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원하는 직무교육을 한 후 교육수행 기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본 계획인데, 2015년과 2016년 교육수행 기업 취업률이 3.9%와 5.6%에 불과했다.

경기도에 사는 정 모씨(68)는 은퇴 이후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최근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지자체에서 낸 취로사업(就勞事業·영세 근로자의 생계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 덕분이다. 정씨는 "어차피 집에서 할 일이 없어 자원봉사를 해왔고 비슷한 고령자가 많았는데 요즘 들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노장년층 자원봉사자들이 자취를 감췄다"며 "원래 자원봉사로 하던 것에 각종 수당을 주면서 일자리 사업으로 둔갑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장년층 대상 사회공헌일자리와 노인일자리사업 등 이른바 '자원봉사형 일자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자녀 용돈까지 받는 여유 있는 고령층도 이처럼 나랏돈이 지원되는 취로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도 지난해부터 일자리 사업이 실제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매우 작다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적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낮은 실업소득 수준을 감안해 노인 등 특정 계층의 기본적 소득을 보조하는 일자리사업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한다"고 정부 부처들과 지자체에 최근 공지했다.

비효율적인 일자리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이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호응을 얻어온 사업은 오히려 종료되고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 200억~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온 '핵심 직무 능력 향상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현재 사업 자체가 종료된 이 사업은 그간 지방 산단에서 '원정교육'을 보낼 정도로 우수한 교육 과정을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예산 삭감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직원 약 100명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光州日報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014면 경제

6차례 합동일자리 박람회 430명 취업 성공

중기부 광주·전남청

올해 6차례 열린 합동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지역에서 430여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16일 광주시와 전남도, 고용노동청, 한국전력 등과 869개사가 참여하는 합동일자리 박람회 6차례 공동개최한 결과 430여명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또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2회·677개사 참여)에서는 316명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취업·산학맞춤반 운영을 통해 특성화고생을 중소기업으로 취업시키는 중기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서는 광주·전남·제주 등 호남권 20개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률 53.9%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50.9%에 비해 높은 성과다.

광주·전남청은 오는 2018년에도 우수강소기업, 산업기능요원, 에너지밸리기업, 특성화고 채용 등 수요자중심 일자리 박람회를 유관기관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머니투데이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024면 사회

경찰 70% "채용 필기과목 헌법 추가 반대"

내부 설문 결과에도 경찰청 강행 움직임… 반발 커질듯

MTonly 경찰 채용 필기시험에 헌법 과목을 추가하는 개편안에 경찰 3분의 2가량이 반대한다는 내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법 공부가 현장 업무수행에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힌 경찰 채용 필기시험과목 개편을 위한 내부 설문조사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설문은 지난 9월26일부터 10월7일까지 이뤄졌으며 전국 경찰 1만5827명이 참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순경공채 법률과목에서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7.5%(9925명)는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순경공채 필기시험에 필요한 3개 과목을 선택해달라는 물음에도 '경찰학개론'(19.7%) '형법'(19.1%) '형사소송법'(17.9%)이 많이 꼽혔다. '헌법'을 선택한 경찰은 2%에 그쳤다. 채용시험 과목 중 업무수행에 가장 도움이 된 과목은 '형법'(38.5%) '형사소송법'(33.3%) '경찰학개론'(15.8%)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설문결과와 달리 경찰청은 기존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공청회를 열어 반발을 사고 있다. 순경공채시험의 경우 헌법과목을 집어넣는 대신 형사와 형소법을 '형사법'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행경채와 간부후보생시험에도 헌법과목이 추가됐다. 경찰청 측은 "경찰의 인권의식 고취 측면에서 헌법과목 포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헌법시험은 인권의식 고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경찰청은 현장이 아닌 지휘부만의 공감대로 과목 개편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도 경찰청 의견수렴 과정이 요식행위로 진행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최민지 기자 mj1@

東亞日報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B02면 경제 금융

단순 노무직 1년새 10만명 줄어 역대 최다

지난달 취업자수 반짝 증가에도 취약계층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반짝 증가했지만 청소원 경비원 등 단순 노무 관련 일자리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하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일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 셈이다.

1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단순 노무 종사자는 358만9000명으로 1년 동안 10만1000명이 줄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단순 노무는 음식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 업무 내용이 간단하거나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종으로 업무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감안한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일자리로 꼽힌다. 통계청은 고용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때 단순 노무 종사자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노무 종사자는 지난해 내내 증가하다가 올해 4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8월 5만 명, 9월 8만4000명, 10월 9만3000명 등 매달 감소 폭이 커지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하고 있다.

임시 근로자와 저학력 취업자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달 임시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1만6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7만8000명 늘어났지만 고졸과 중졸 이하 학력자는 각각 21만6000명, 9만8000명 줄었다. 고졸 학력 취업자 수는 2월부터 감소로 전환한 뒤 7월부터는 5개월째 감소 폭이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718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6만5000명 늘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매일경제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A01면 종합

청년農 게임기 사는데 쓰인 취업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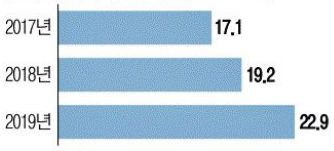
구멍난 일자리예산 ①
올 일자리에 23조원 투입
신규일자리 1개당 2억 꼴
"방만한 운영에 세금 줄줄"

청년 영농 정착 지원금은 만 40세 미만 젊은 농부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예산 중 하나다. 그런데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실상은 '눈먼 돈'에 가까웠다. 지난 4월 선발된 한 청년농의 직불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S커피전문점 충전카드에 117만5000원을 썼다. 자신이 매달 100만원씩 받은 돈 중 5분의 1 이상을 커피 마시는 데 사용한 것이다. 다른 청년농은 지난 6월 P게임기 구매에 53만9800원을 결제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는 데 사용하거나 산후조리원에 140만원을 쓴 사례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지원금 대상자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6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A3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일자리예산만 54조원 투입됐지만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 당황한 정부는 재정 투입 확대에 혈안이 돼 있다. 당장 내년 일자리예산을 올해보다 19.2% 증가한 22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65%는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연도별 일자리 본예산(단위=조원)



*일자리 추경(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000억원)과 일자리안정자금(3조원)은 제외한 수치.
자료=기획재정부·통계청

이렇게 정부가 재정 투입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일자리예산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일자리예산에 구멍이 났다는 것이다. 막대한 일자리예산이 노동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줄줄 새거나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안 중 본예산 19조2000억원과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명목으로 배정한 3조7800억원을 더하면 총 예산은 22조9800억원에 달한다. 올해 1~11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0만3000명에 그쳤다. 12월에도 같은 수준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올해 늘어난 일자리 1개당 일자리예산이 2억2311만원 투입되는 셈이다. 그만큼 일자리 재정 투입 효과가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자리예산 투입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만 3조2000억원이 배정된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포기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 지침'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민간 일자리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평균 16.9%에 불과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랏돈을 쓰는 데만 치중하고 민간 취업 연계 지원 같은 본래 업무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야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